

FTA 무역환경에서의 관세행정 전략

Customs Administration strategies under FTA's trade environment

최희인*

목 차

- | | |
|---------------|---------------------------|
| I. 추진배경 | III. FTA에 대응한 관세행정 발전방향 |
| II. FTA와 관세행정 | IV. 40대 이행과제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
| 1. FTA 협상 | 1. 고객지원체제 구축 분야 |
| 2. 수출입관리 | 2. 특혜통관제도 혁신 분야 |
| 3. 징세행정 | 3. 국제협력강화 분야 |
| 4. 관세 환급 및 감면 | 4. 조직인력체제 개편 분야 |
| 5. 특혜 관세율 적용 | V. 경과 및 향후계획 |
| 6. 원산지관리 | |

Abstract

The Customs Administration, unlike other administrative service, should respond to constantly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The Customs has to actively adapt itself to government policy changes, economic chang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changes to facilitate the flow of trade logistics and maintain trading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policy direction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which enforces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ariff and non-tariff barrier elimination for the trade liberalization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FTAs on a multi-track basis. This paper aims to seek ways to apply FTA policies to the Korean society and economy in a smooth manner.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Customs administration brought by the proliferation of FTAs to such areas as FTA negotiations, import/export management, duties and taxes collection, drawback, reduction/exemption of duty, application area of preferential tariff rate and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Then, the paper sets FTA missions of "supporting Customs Administration to lead the new trend of free trade environment" after analyzing the environment changes.

To achieve the FTA mission mentioned above, the KCS designated 4 strategies and 40 implementation tasks. The 4 strategies are named "4C Strategies" taking initial letters from Client-oriented, Customized procedures, Cooperation and Constitution. "4C" also refers to Foresee(strategies to foresee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FTA policies) or For C(Customer or Customs).

The KCS will continue to create new tasks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process, and to help FTA regime successfully take root in Korea.

* 관세청 공정무역과장

I. 추진배경

지난 4월 2일 제2의 개국이라는 한·미 FTA가 타결되고, 같은 날 한·아세안 FTA가 국회비준을 통과하여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FTA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FTA를 중요한 통상정책 수단으로 채택하여 동시다발적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6개국과 FTA를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교역량의 4% 정도가 FTA체결국과의 교역이다. 금년 6월 1일 ASEAN과의 FTA가 발효되면, 그 비중은 10%이상으로 늘어나고,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그 수준은 23%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은 관세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지원국장을 팀장으로 FTA 관세행정전략 T/F팀을 구성하여 FTA 이행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시민단체·언론·학계 및 관세청 유관기관과 'FTA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T/F팀에서 도출한 전략 및 세부 이행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4대 전략 40대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07.2.10)하였다. 향후 FTA 이행의 기본틀을 마련하여 통관·물류 등 다른 분야에 뒤지지 않는 Global Top 수준의 FTA 관세행정을 이룩함으로써 "선진통상국가를 실현하는 Global Top 관세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관세청의 비전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FTA와 관세행정

이 분야는 협상분야, 수출입관리, 징세행정, 환급 및 감면, 관세율, 원산지관리 등 6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FTA 협상

협상현황과 전망을 보면 EU, 캐나다, 인도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멕시코와 일본은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언제라도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중국, Mercosur와는 FTA 가능성을 모색하는 민·관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공동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FTA 발효현황과 전망을 보면 기 발효된 FTA 이외에 ASEAN 9개국*과의 FTA가 곧 발효될 예정이며, 2009년에는 미국, EU 등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32개국과, 2011년에는 중국 등 5개국 이상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FTA 협상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관세청의 FTA 협상업무는 물론, FTA 협정의 국내 이행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수출입관리

전체적으로 수출입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칠레의 경우를 보면 2004년 발효 후 3년간 교역규모가 182%가 증가하는 등 FTA 국가와의 교역량이 전체교역량 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추세를 바탕으로, 2011년에 미국, 중국, EU 등 5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다고 가정할 때 전체교역의 70% 이상이 FTA체결국가와의 특혜교역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

* 태국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제외 되었으나, 향후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되면 한·아세안 FTA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는 원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역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고 이를 감당할 새로운 조직과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3. 징세행정

관세율은 지난 5년간 25%가 하락했으나 앞으로도 FTA가 본격화 될 경우 더욱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세율은 앞으로도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세청의 징수액은 2006년 기준으로 관세가 6,8조원(18.7%), 내국세가 29.6조원(81.3%)로 내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관세청의 징세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재정기여도의 경우도 '03년 25% '04년 27% '05년 25.4% '06년 26.5%로 현재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징세액 증가에 따라 관세청의 징세관련 업무량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관세율 인하가 관세청의 징세액 감소 또는 기능축소와 직결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더라도 내국세 부과업무는 오히려 증가하며, 국가별·년도별 관세율 차등적용, 원산지 심사수요 증가 등에 따라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관세 환급 및 감면

FTA 증가 속에서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전체적인 환급 및 감면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환급은 '01년에 비하여 '06년도에

7%, 감면은 61% 증가하였다.

환급액의 경우 단기적으로 교역량 증가폭이 관세율 인하보다 커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 관세철폐 품목이 크게 확대되고, FTA국가와의 교역량이 비체결국국가와의 교역량을 추월할 경우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의 경우 단기적으로 ASEAN과의 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장기적으로 감면품목 수입이 많은 일본, 미국, EU 등과 FTA가 발효되면,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FTA를 악용한 부정환급·부정감면을 방지하면서, 환급·감면 업무량 변화를 분석하고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특혜 관세율 적용

관세율이 같은 품목이라도 국가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각각 달라져서 매우 복잡해진다. 예를 들면 동축케이블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 EFTA에서 보듯이 수입국 마다 관세율이 다르고 년도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 특혜관세 신청절차도 다양해진다. 관세법에는 특혜관세를 통관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FTA에서는 통관 후에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작성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산으로 송부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복잡화에 따라 FTA에 대한 정보제공 수요가 증가하고, 관세행정의 난이도가 더 한층 높아지며, 행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동축케이블의 연도별·원산지별 관세율

품 명 (품목번호)	연도별	적용대상국별 세율			
		칠레	싱가포르	EFTA	비FTA국가
동축케이블 (8544.20)	2007	0%	5.3%	6%	8%
	2008	0%	4%	5%	8%
	2009	0%	2.7%	4%	8%
	2010	0%	1.3%	3%	8%
	2011	0%	0%	2%	8%
	2012	0%	0%	1%	8%
	2013	0%	0%	0%	8%

6. 원산지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산지 검증제도가 다양해졌다. 원산지증명서를 누가 발급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칠레, EFTA, 미국은 수출자(미국은 수입자 포함)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반면, 싱가포르, ASEAN 등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도 칠레, 싱가포르, 미국처럼 FTA 상대국에 방문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EFTA처럼 상대국 세관에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세안과 같이 양자 모두 가능한 협정도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원화되어 누적기준, 미소기준, 역외 가공 인정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도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예를 들면 ‘동축케이블’의 경우 칠레는 4단위 세번(HS code)변경기준, EFTA는 부가가치기준, 싱가포르는 이들의 복합기준, 미국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복잡화에 따라 원산지증명 관련업무가 크게 늘고, 관세행정 수요자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까지 확대되며 복잡한 원산지기준을 악용한 우회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Ⅲ. FTA에 대응한 관세행정 발전방향

관세청은 자유무역환경을 전략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Global Top 수준의 FTA 관세행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FTA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FTA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관세청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고객을 만족시키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Client-oriented), 둘째 Global Standard형 통관체제 구축(Customized procedure), 셋째 체계적인 FTA협상 및 협력체제 강화(Cooperation), 넷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Constitution)를 4대 추진 전략으로 하여, 4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40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다.

관세청은 FTA 전략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략명칭을 “4C(four C)”로 정해보았다. 4C는 4가지 전략의 머리글자인 C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성공적인 FTA 체제구축을 예견하는 전략(forsee)이며, 고객(customer)과 세관(customs)을 위한 전략(for C)을 표현하고 있다.

<표 2> 관세행정 발전 방향

	AS-IS	To-be
고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민원 분산처리 수동적 수출입활동 지원 One-by-one 문답식 안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민원 집중처리(고객센터) 능동적 수출입활동 지원 (FTA형 Business Model 개발·컨설팅) One-stop 인터넷조회·검색시스템
특혜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 직접방문 발급 국가간 C/O 우편교환 FTA위험정보 임무분야별 분산관리 C/O 부정발급 방지체제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 Internet 발급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e-C/O 교환 FTA 위험정보 통합관리 C/O 부정발급 방지체제 (공장등록제, 수출자인증제 등)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FTA 국가와 상호지원체제 사안별 원산지 정보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FTA 국가와 상호지원체제 상시 원산지 정보교환체제
조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관리형 수동적 조직 소수 전문요원에 의한 FTA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선도형 기능성 조직 전직원 FTA 대응형 전문요원화

IV. 40대 이행과제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1. 고객지원체제 구축 분야

FTA 확대에 따라 무역업계의 혼선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별로 정보제공 및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에 관한 민간업체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고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방향으로는 대고객 서비스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민간전문기관을 육성하며, 종합정보제공 Website를 운영하여 민간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FTA와 관련한 수출입업체의 수익창출을 지원(FTA 비즈니스 모델)하며, FTA에 대한 대내·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사 역할을 제고하는 등 FTA로 인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객지원 분야의 구체적인 Action Plan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고객지원조직 강화 분야

현재는 FTA 고객의 관세행정 수요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고객지원센

터'를 확대 개편하여, FTA 제도 상담,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컨설팅을 전담케 하고, 향후에는 FTA 민간 전문기관을 신설하여, 고객센터 업무 중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각종 FTA 정보서비스,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컨설팅, 세관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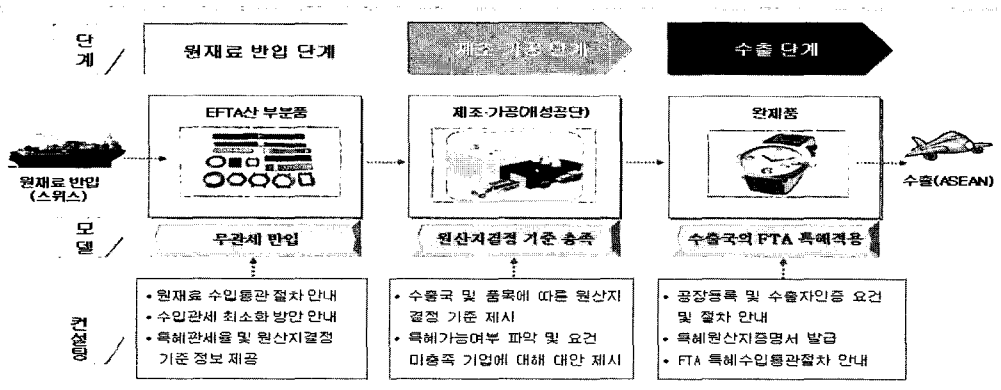
2) FTA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분야

FTA 확대에 따라 FTA 상대국별·물품별로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의 FTA 특혜대상여부,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상대국 통관절차 등 기업의 FTA 관련정보 수집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즉 수출입 기업들의 FTA 수혜폭 확대를 위해 FTA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보제공은 수입자 위주의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FTA 체결국의 관세율, 통관절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 포털 Website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FTA에 생소한 기업들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 고객 눈높이에 맞추어 수출기업들을 위해 품목별로 상대국의 관세율 정보,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

서 발급절차, 특혜관세 신청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FTA별 협정세율 및 원산지 D/B 등을 활용하여, FTA 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 FTA Business Model을 On-line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FTA 포털에 시스템화 하는 등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3)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분야

현재 FTA 국가별로 적용되는 관세율과 원산지기준이 다양하여, 수출입자가 거래 상대국을 선택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이 실제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민간기업이 FTA 특혜세율과 원산지기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은 FTA 고객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 할 계획이다.



<그림 1> 비즈니스모델 개발과정(예시)

4) 특혜 수혜 지원 분야

현재 FTA 특혜제도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특혜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전국세관에 FTA 통관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07.4)하였고, 특혜 적용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특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 5단체, 관세사회 등과 공동으로 민간업체에 대한 설명회 등을 대폭 확대 할 계획이다.

2. 특혜통관제도 혁신 분야

현재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 증명방식이 다양해지고 FTA 마다 독특한 특

혜통관절차가 많이 생김에 따라, 이전의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중심의 심사체제를 원산지 중심 심사체제로 전환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되, 원산지 증명서 부정발급을 방지하며, FTA 경험이 많은 국가의 제도와 운영실태에 관해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원산지심사 강화 분야

현재 원산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법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FTA를 악용한 원산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FTA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그리고 원산지기준별 심사·조사 지침을 운영하며, FTA가 정착될 때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체제 혁신 분야

현재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체도를 개선하여 공통항목이 많은 수출신고시스템과 CO발급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출신고서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CO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 인증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특혜통관제도 개선 분야

향후에는 특혜통관절차를 더욱 개선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대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후에도 특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FTA 이행경험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벤치마킹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3. 국제협력강화 분야

현재 FTA 협상 상대국이 급증하고 있어 관세청 소관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협상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협정이 발효된 당사국과는 세관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국의 산업 및 제도의 특성에 따른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FTA 상대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며, 부정무역에 관한 국제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

1) 체계적 협상체제 구축 분야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FTA 상대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

도록 협정문 모델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협상과 이행 각 단계마다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응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2) 체약국 세관과의 협력 강화

FTA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협상 단계부터 양국 세관 실무책임자간 Contact Points를 구축하고, FTA 상대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존 상호지원협정을 FTA 시대에 맞게 보완하며, FTA 상대국과 세관직원 상호 교환연수를 실시하여 수출상대국에서의 FTA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체약국간 통관원활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3) 국제 수사공조 분야

현재 국제적인 원산지 정보 교환 또는 특혜교역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공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ASEAN, ASEM 등 지역협력체를 통해 원산지 위반정보를 교환하고, 중국, 일본 등 이웃 국가와의 조사 실무자회의를 확대하며, 세계관세기구 차원에서도 수사정보 교환프로그램을 제안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4. 조직인력체제 개편 분야

최근 FTA가 새롭게 발효되는 국가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FTA 협상, 원산지심사 등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며,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교육 및 예산도 FTA 시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1) 조직개편

금년 초에 FTA 협상 및 원산지심사, 권리구제와 같은 시급한 분야의 전담부서를 신설, 고객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나

머지 분야는 조직진단 시 업무량 변화 및 인력 수요를 정밀 분석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2) 전문인력 양성 분야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세연수원의 모든 교육과정에 FTA과목을 편성하고, 통관, 심사, 조사 분야별로, 그리고 각 분야의 경력 단계별로 'FTA전문과정'을 신설하며, 장·단기 훈련자에 대한 FTA 과제 부여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3) 예산 확보 분야

FTA 관련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2008년 이후 예산은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V. 경과 및 향후계획

2007년 2월1일 경제계, 학계, 관련부처로 구성된 관세청 제1차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FTA 대응전략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청와대, 국회, 재경부 등 유관기관과 언론 그리고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대응전략을 설명하였다. 이 중 고객자원분야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동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세안 발효 대비와 더불어 전국세관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2차 FTA 추진위원회는 금년 6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본 로드맵에 포함시키고, FTA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